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반대 캠페인 8일 여수시 신기동 부영3차 사거리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행동 제공

광주연구원 첫 원장 공모...8월 개원 '속도'

광주시, 후보자추천위원회 열어 절차 논의...12일 공고

광주시가 광주연구원을 이끌어 갈 원장 선정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제1차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이날 원장 모집 공고에 관한 내용, 향후 원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구원 원장 공모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 제41차 이사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운영키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4일 시의회에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 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다. 조례안은 현행 '광주전남연구원

설립·운영 조례'를 '광주연구원 설립·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광주 시민 복리 증진과 광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시 행정과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의 조사·연구, 행·의정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전남 등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지칭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도록 했다. 이사장·이사·감사 임기는 각각 3년 씩이며, 원장은 공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이내 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첫 출발한 뒤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2007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광주발전연구원으로 각각 분리됐다. /권형민 기자

전남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공론화 본격

도, 설명회 첫 주관... '거점 공항' 시각 전환 필요

무안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정확 정보 제공

전남도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통합이전을 위한 공론화를 주도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도내 여론에 부응키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를 직접 주도해 열었다.

8일 무안에 소재한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엔 무안과 남양 인근 주민 등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역 사회 주도로 목포대학교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전남사회단체 연합회 주최로 강연회가 열렸지만

전남도가 주관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선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용선 전 행정관은 강연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며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2030년 대구 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에 비추면 앞으로 전남과 광주 간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접근이 아닌,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거점 공항'을 무안에 개항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공항 이전은 특정 기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자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주도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안공항에 항공특화사업단지(MRO)가 조성되고 향후 저가항공사(LCC) 등 민간항공기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 항공정비 물량까지 민간으로 이전되면 항공산업이 집적화돼 무안공항 일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군 공항 이전 시 남양신도시나 목포 원도심 일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소음진동학회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조성하는 대구공항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2016년)를 분석한 결과 공항 주변 일부 지역에만 소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비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에 참석자들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도기 기자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日오염수 청문회 합의

선관위 국조, 채용 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 대상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은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도록 돼 있다"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 비리가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주 기자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2면
입당원서 지지후보 명기 후폭풍 3면
광주 전남 주시거래 대금 급감 4면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임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임1. 컨테이너 3X6



타임2. 컨테이너 3X9



타임3. 농막 3X6



타임4. 농막 3X9



타임5. 휴먼부스



맞춤제작

010-6265-0057

TALK

